

## 산별교섭 정상화까지 기업지부 해소 유예

### 노조, 10기 마지막·50차 임시대대 열어 ... 기업지부 산별 강화 복무방안·지역지부 강화 전략 수립하기로

금속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산별교섭을 정상화할 때까지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12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5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대대는 지난 49차 임시대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약 부칙 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 규정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임시대대를 다시 소집하게 돼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라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대의원들이 책임 있게 토론하고 의결



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제 금속노조는 투쟁사업장을 보듬어 안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치밀하게 11기를 준비해야 한다. 11기를 1기처럼 생각하겠다. 현장을 중심에 두고 결의하고 실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는 곧바로 규약 부칙 개정안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대의원 395명이 투표에 참가해 315명(79.7%)이 찬성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11기 대대에서 ▲산별교섭 정상화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기업지부가 금속 산별운동 강화 위한 복무방안 수립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 수립 등 규약 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해 왔다.

## 차덕현, 11기 전북지부장 당선

### 전충배 수석-황의택 사무국장 선출 ... 미조직·비정규 전략 조직화·교육사업 강화 등 공약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차덕현 현 지부장을 11기 지부장으로 뽑았다.

전북지부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지부 임원 선거를 벌였다. 지부 조합원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전북지부를 이끌 임원으로 전충배 수석부지부장, 황의택

사무국장도 함께 선출했다. 전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조합원 1천 813명이 투표해, 1천 513명(득표율 84%)이 찬성했다며 당선인 결정 공고를 했다.

현직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인 차덕현(타타대우상용차지회)-전충배(아이

에스테크지회)-황의택(서연인테크분회) 후보자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현장 단위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강화 ▲미조직·비정규 전략 조직화 강화 ▲지역본부·기업지부와 연대사업 강화 등을 공약하며 단독 출마했다.

# 법원, 삼성 전방위 노조파괴·불법 파견 인정. 범죄자들 법정구속

이재용 등 총수 일가 불기소 한계, 형량도 낮아 ... “노조 간부 징계 등 사측 위력행사, 노조 업무방해다”

한국 사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범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징역 1년 6개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송영규 삼성전자 전문위원(노무사, 징역 10개월), 김정환 정보 경찰(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도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경총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파괴 사건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환영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그룹 경영진의 전방위 노조 파괴 범죄를 공식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 삼성 노조 파괴 주요 범죄자 법정구속

지회는 더불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로 원청이 도급 계약 형식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 폐업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지회는 검찰이 노조 파괴 공작 최종 책임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

수 일가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형량도 낮다고 지적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은 시간에 비해 너무 늦은 판결”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징역 1년 4개월)을 언급하며, 삼성그룹 노조 파괴 관련 선고에서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등 사측의 위력행사를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본 점을 평가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비록 1심에서 주요 범죄자들을 구속했지만, 삼성그룹은 보석 신청 등으로 나오려 할 것이다. 방어권을 행사하며 노조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의 끝은 이재용을 향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노조를 파괴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을 일삼는 범죄집단의 총수가 버젓이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재용을 재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